

'96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原電立地反撥과 住民參與의 關係에 관한 分析的 研究：
三陟 原子力發電所 立地反撥事例를 中心으로

柳 海 雲

한국원자력문화재단

吳 昌 澤

광운대학교

요 약

원전입지에 대한 주민반발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일층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극복해야만 할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와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또한 삼척 원전 반발사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전반발과 주민참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흡한 주민참여는 원전반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곤란하며, 원전정책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序 論

일반적으로 일반대중들은 위험시설(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가스충전소 등)이나 공해배출시설(쓰레기처리 및 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또는 지역이미지 실추시설(교도소, 마약중독자수용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들이 자신들의 인근 거주지역에 입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비선호시설들 가운데에서도 지역주민들에 의해 가장 기피되고 있는 시설은 바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원자력시설이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기피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반발은 다른 어느 것에 비해 강력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일층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극복해야만 할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입지시키는 과정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원자력정책들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주도주의는 오늘날 관행화되어 일단 원자력정책이 결정되면 아무런 반발이나 저항없이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낳았다. 또한 과거 국민들도 정부의 원자력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묵묵히 순응하였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국가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생활의 질이 높아진 오늘날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의 다원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정책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주민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바람직한 주민참여관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둘째, 이를 토대로 실제 사례, 즉 삼척 원전입지 반발사례를 분석하고, 셋째, 이를 근거로 정부의 바람직한 주민참여관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사례분석을 위해 각종 학술서적과 논문에 의존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원전반발과 주민참여와의 관계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주민반발과 다른 영향요인들(예를 들면, 위험인식이나 지각하락 등)의 관계를 고려치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原電立地反撥과 住民參與의 關係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되어 가고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가일층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첫째, 일반대중들의 전문지식의 결여, 둘째, 의사결정시에 초래되는 행정상의 복잡성과 비능률성, 셋째,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일반대중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 넷째, 참여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지의 책임성 문제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인하여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1] 이에 반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첫째, 행정상의 의사결정사항들에 대한 정당성의 제공, 둘째, 갈등해결의 촉진, 셋째, 정부의 의사결정사항들에 대한 수용성의 제고, 넷째, 일반대중들의 관심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고양, 다섯째,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가능성의 증대, 여섯째, 외부의 관점, 비밀상적인 전문지식, 대부분의 선출된 공무원들 보다 먼 장기적인 전망의 제공 등의 이유로 행정과정상의 주민참여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2]

이상과 같은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상반된 논의는 중국적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느냐의 행정가치상의 문제와 참여하는 주민들을 X이론(인간=비성숙한 존재)적 관점에서 조명하느냐 아니면 Y이론(인간=성숙한 존재)적 관점에서 조명하느냐의 주민참여자들에 대한 인간관의 문제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 있어서 만큼은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창하고 있다. 이는 첫째, 엄청난 위험과 관련된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부과하는 결정은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문제로서 정당성을 필요로 하고,[3] 둘째,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활동은 단일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상이한 목적과 관심을 지닌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갈등해결의 산물이며,[4] 셋째,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부정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해당 입지지역의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용없이는 결코 시설입지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5]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에 따른 주민반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질적인 수준과 정보의 공개정도에 있다. 이는 이들 요인들이 주민반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과 주민참여의 질적인 수준 및 정보공개와의 관계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原電立地反撥과 住民參與의 質的인 水準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의 질적인 수준이 낮을 경우,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입지에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시설의 입지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반대중들과 환경론자들은 시설입지계획의 초기단계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참여 전 과정에 걸쳐 주민참여 그 자체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주민참여 그 자체를 매우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지역주민들은 정부나 민간산업체와 같은 시설입지사업 추진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고조시키게 된다.[7] 이러한 결과는 첫째, 주민참여자들이 중요한 시설입지계획이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은 반대무마책의 일환으로 한낱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둘째, 주민참여자들이 주민참여의 기회제공을 단지 법적인 명령만을 수행하고 기정사실을 합법화하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국적으로 질적인 수준이 낮은 주민참여는 원자력발전소의 해당 입지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기만행위로 비춰져 사업추진주체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주민반발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 原電立地反撥과 情報公開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신고시설들의 입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은 공청회나 특별조사단이나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시설입지과정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로 되는 자원들을 부여받아야 하고 시설입지 찬성자들의 제시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8]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생산 또는 폐기되는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 복지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입지되는 원자력발전소는 과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와 같은 시설입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의 정보검토 권리주장들이 하나의 힘으로 결집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신고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강하게 표출되며, 실제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정치적 의사결정자의 무능력이나 비자발성에 의해서 심화되고 있다.[9] 지역주민들은 시설입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하며 사업추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가급적 제한하고자 함으로써 주민반발이 촉발 또는 심화되는 것이다.

Baruch Fischhoff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전문가들은 이해관계를 지닌 주요 당사자들 가운데 한 당사자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일반대중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다른 복잡한 전문기술-집약적 산업들(expert-intensive industries)과 같이 원자력은 지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일반대중들은 주로 반대자들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검토되며 또한 대중매체라는 여과기를 통해서만 원자력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10]

3. 三陟 原子力發電所 立地反撥事例

3.1 事例의 概要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일층 증가인포에 있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79년과 1980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원전건설입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원전입지조건에 적합한 9개 지역(강원도 삼척 덕산리, 경북 울진 직산리, 경북 울진 산포리, 전남 보성 비봉리, 전남 장흥 신리, 전남 고흥 장계리, 전남 신안 송공리, 전남 해안 외림리, 전남 여천 이목리)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9개의 원전입지 후보지 중 삼척지역이 1981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와 1991년에 끝마친 예비 조사 결과 원전입지 3대 요건(지질층, 인구분포, 공업용수) 및 건축자재 수급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입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부각되었다.

삼척지역은 1982년에 원전입지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정부가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제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또한 구체적인 입지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원전입지로 인한 주민반발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중 '정부가 이미 확정된 9개 원전 후보지 가운데 삼척지역을 실제 원전 입지지역으로 선정하여, 1992년에 원전건설을 착공하고 2006년에 완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하는 기사가 보도 뒤을 계기로 삼척지역에서의 원전입지문제는 공식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93년에 '9개 원전 후보지 중 삼척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데다 현재 강원지역에는 원전이 하나도 없어 기존 원전입지지역인 고리·월성·영광·울진에 이어 삼척이 다섯 번째로 원전입지지역이 될 것이며, 정부는 1998년경 원전 4기 내지 6기를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하고 주민동의를 얻는대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삼척지역에서의 원전입지에 따른 주민반발이 구체화되었다.

삼척지역에서 원전입지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반발운동이 발발한 것은 1991년 8월 이었다. 삼척군 근덕면 번영회와 지역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삼척원전건설반대 위원회"가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동년 8월 29일에 삼척 군의회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전입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원전입지반대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1993년도에 들어와 삼척지역에 원전입지가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한전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입지홍보 활동이 활발해지자 지역주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년 6월 16일 기존의 "삼척 원전건설반대 위원회"를 "삼척원전건설반대 투쟁위원회"로 재편하였고, 삼척 군의회의 근덕면 지역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삼척원전건설반대 추진위원회"가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직적으로 반원전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1993년 8월 29일에는 "삼척원전결사반대 쉼기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입지계획을 발표한 충격에 대해 육체적 및 정신적 보상을 하라'는 경고문 낭독이 있었고, 또한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되어 가는 삼척지역에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전입지가 추진되어 죽음의 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9월 16일에는 삼척산업대학교 학생 30여명이 교내 민주광장에서 원전건설결사반대 총 쉼기 대회를 가졌으며, 9월 18일에는 시·군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반발은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던 중 9월 19일 정부는 2006년까지 전국에 74개의 발전소(원전 14개 포함)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여 또 다시 주민들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10월 19일 상공자원부는 강원도 의회가 제출한 원전건설반대 건의안에 대한 회신에서 삼척을 원전입지후보지로 지정했으나 건설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원전건설은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아니라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원치론적으로 답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11월 27일에는 삼척주민 1만여명이 원전건설의 완전백지화를 요구하며 "원전건설반대 삼척시·군민 총 쉼기 대회"를 갖졌다. 쉼기대회에서 사용한 구호 중에는 '지역주민동의 없이 원전건설 웬말 이냐'와 같은 주민의견 무시와 관련된 내용과 '살인광선 죽음의 핵발전소 결사반대' 등 핵 또는 방사능의 공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994년에는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한 "원전건설백지화 결의대회"가 있었으나, 1993년의 두차례 대규모 주민반발 이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삼척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대부분 중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적인 주민반발은 없었고 고조

되었던 반대 분위기도 상당히 진정되었다.

3.2 事例의 分析

3.2.1 住民參與의 質的인 水準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삼척에 입지시키려는 과정속에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즉, 원자력발전소가 해당 입지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지를 결정한 후에도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 참여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삼척원전의 경우, 1982년에 원전후보지로 지정하여 1993년에 입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까지 정부는 해당지역에서의 공청회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목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정부는 원전입지와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시, 그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원전입지결정 및 입지사업 추진업무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명목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 지역의 반대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공청회를 해당 입지지역이 아닌 서울 등지에서 중앙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해당 원전입지 지역주민들에게 질적인 수준이 낮은 주민참여를 제공하였고, 이는 다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원전입지에 극렬하게 반발하게끔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2.2 情報公開

정부는 삼척에 원자력발전소를 입지시키려는 과정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철저히 제한하였다. 1982년 삼척을 원전입지 후보지로 결정한 이래로, 정부는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지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1991년 6월 중순 언론매체에 의해 원전입지계획이 알려지기 전까지 삼척에서의 원전입지추진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간혹 지역주민들이 원전입지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속에서도 정부측은 원전입지추진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제한은 삼척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에 반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원전 후보지 결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원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정부의 정보제한으로 대부분의 삼척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원전 후보지로 고시되었다는 점과 원전이 실제로 자신들의 지역에 건설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매체를 통해 삼척에 곧 원전건설을 착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자신들이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한 소외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삼척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에 반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 結 論

이상에서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와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또한 삼척 원전 반발 사례를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원전반발과 주민참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흡한 주민참여는 원전반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바람직한 주민참여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원전입지선정 및 입지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켜야만 한다. 그 이유는 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정부를 포함한 사업추진자들은 원전입지선정 및 입지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② 해당 입지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어 원전입지에 관한 주민들과의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③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추진자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체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고, ④ 원전이 입지된 이후에도 시설의 운영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감시에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전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삼척 원전반발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입지 지역의 생태학적인 특성에 관한 심도있는 고려나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과는 관계없이 어떻게해서든지 원전을 특정 지역에 입지시키려고만 노력하였다. 즉,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치 않고 밀신행정에 의해 독단으로 원전입지를 은밀하게 추진하려 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에 부딪치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민들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그것이 주민자신들과 거주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지역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전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만 한다. 지역주민들이 원전정책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해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참여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곤란하며,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다원적 욕구를 지니게 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원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 [1] Joel D. Aberbach & Bert A. Rockman, "Administrators' Beliefs about the Role of the Public : The Case of American Federal Executive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978, vol. 31, pp.502-522 ; D. Steven Cupps, "Emerging Problems of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7, vol. 37, pp. 478-487.
- [2] Stuart Langton(ed.),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1978) ;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merican Federal System*. (Washington, DC : ACIR), pp.A-73 ; Walter A. Rosenbaum, "The Paradoxes of Public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and Society*, 1976, vol.8, no.3, pp.355-383.
- [3] Susan G. Hadden, "Public Policies toward Risk", *Policy Studies Journal*, 1980, vol.9, no.1, p. 113.
- [4] Howard Kunreuther, Joanne Linnerooth, & James W. Vaupel, "A Decision-Process Perspective on Risk and Policy Analysis", in Robert W. Lake (ed.),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New Jersey :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1987), p.260.
- [5] S. A. Carnes, E. D. Copenhaver, J. H. Sorensen, E. J. Soderstrom, J. H. Reed, D. J. Bjornstad, & E. Peelle, "Incentives and Nuclear Waste Siting : Projects and Constraints", in Robert W. Lake(ed.),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New Jersey :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1987), p.356.
- [6] Susan G. Hadden, "Public Perception of Hazardous Waste", *Risk Analysis*, 1991, vol.11, no.1, pp.47-57.
- [7] Gail Bingham & Daniel S. Miller, "Prospects for Resolving Hazardous Waste Siting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Natural Resources Lawyer*, 1984, vol.17, no.3, pp.477-478.
- [8] Howard Kunreuther, Kevin Fitzgerald, & Thomas D. Aarts, "Siting Noxious Facility Siting Credo", *Risk Analysis*, 1993, vol.13, no.3, p.304.
- [9] Dianne Gilbert, "Not in My Backyard", *Social Work*, 1993, vol. 38, no.1, pp.7-8.
- [10] Baruch Fischhoff, "'Acceptable Risk' : The Case of Nuclear Power",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83, vol.2, no.4, p.566.